“계엄을 넘어 지방분권으로, 광주의 염원”

기고

박필순
광주시의원

“12·3 계엄을 이긴 광주정신.”

지난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만민공동회’에 현수막이 걸렸다. 1980년, 무도한 군사정권을 타도했던 광주광역시는, 2025년 공권력을 남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12·3 계엄을 물리쳤다.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광주시민들은, 지금 다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지방이 살아 숨 쉬는 새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어느 때보다 혹독한 재정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2025년 광주시 본예산은 7조 6070억원으로 사상 최대지만, 재정자립도 35.52%는 최근 5년 최저이자 특·광역시 중 최하위권이다.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율은 47%에 그쳐 전년 대비 1134억원이 줄었다. 도시철도 2호선(총사업비 3조 1449억 원)·군공항 이전 같은 국책 매칭 부담만 1조원대. “확장예산의 착시”가 시민복지 예산을 잠식하고 있다.

할 일은 차고 넘친다. 도시철도 2호선은 아직 1단계도 마무리하지 못했고,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복합쇼핑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천·상무선 등 해야 할 대형사업들이 줄을 서고 있다.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는 아파트, 교량, 하수관거 등 도시 기반시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부채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문화수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간판 사업에 기대어 지역 부흥을 꿈꿨다. 하지만 국비 의존형 쇼케이스 사업은 번번이 예산 삭감과 운영적자에 발목이 잡혔고, 지역 경제를 떠받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

대형 국책 매칭 부담까지 겹치며 시 살림은 ‘빚내서 생존’하는 구조로 고착됐다. 더는 중앙 눈치만 보는 전시성 프로젝트로 버틸 수 없다. 광주가 살길은 ‘진짜 지방분권’이다.

이제는 전환이 필요하다.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수준의 비수도권 성장을 이루려면, 과감히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자치 30년 되는 해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그 분기점이다.

대선 후보마다 ‘메가시티’를 외치지만, 재정권 없는 메가시티는 껍데기다. 광주·전남 역시 초광역 경제권을 꿈꾼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빈사 상태인 현실을 외면한 거대 청사진은,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 광주광역시만 해도 도시철도 2호선, 군 공항 이전 등 국책사업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있다. 지방이 일어서려면,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첫째, 지방재정분권 로드맵을 세우자. 차기 정부 임기 내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목표를 확립하자. 이미 유럽 선진국 대부분은 주민 삶과 직결된 예산은 지방이 직접 편성·집행하도록 해 자치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중심 예산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의결권과 예산권을 부여해야 한다. 칼자루를, 이제는 지방에 넘기자.

둘째, ‘제2국무회의’를 신설, 자치권과 의결권을 부여하자. 중앙부처 장관 중심 제1국무회의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결권을 갖는 제2국무회의를 법제화하자.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약속하고도 미완에 그친 과제를 이제는 실현하자. 계엄 사태로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의 모순을 확인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는 분권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차기 정부 임기 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헌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부여하자.

셋째, 5대 메가시티에 자치권을 부여하자. 수도권·충청권·호남권·부울경·대구경북 등 5개 권역으로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구성해 성장동력을 분산하고, 세입·세출의 자율예산권을 부여하자. 이재명·김경수·김동현, 민주당의 세 대선 후보의 공통점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라는 것이다.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의 국토 균형 대전환, 적기에 적임자들이 나서고 있다.

넷째, 노무현의 ‘문화수도 광주’ 구상을 완성하자. 대통령실 이전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지방시대를 열자. ‘해양수도’ 부산으로 해양수산부가 간다면, ‘문화수도’ 광주로 문화관광부가 이전해도 좋겠다. 그게 어렵다면, 광주광역시에 ‘아시아문화청’을 신설해 문화산업의 국제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을 설치해 콘텐츠·디지털 예술·기술의 융합 기반을 갖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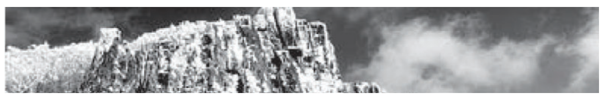
다섯째, 광주광역시를 명실상부한 AI중심도시로 세우자. 핵심은 AI정부 기구를 광주에 설치하는 것이다. ‘AI데이터청’과 ‘AI진흥원’을 꿈꿔본다. 국가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팅센터를 운영하고, 국가적 AI산업의 전략을 광주에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

‘재정 없는 자치’는 허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여수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지방분권공화국”을 천명하고 지방재정분권과 제2국무회의를 약속했으나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새 민주정부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제2국무회의 신설 △단계별 재정분권 로드맵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재정분권을 약속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흥망을 가를 분수령이다. 수도권에 밀집돼 모두 함께 말라가는 대한민국을 유지할 것이냐, 오랜 과제인 지방분권을 해소해 대한민국의 막힌 혈을 뚫는 전환점이 될 것이냐. 이제는 수도권 블랙홀에 갇힌 ‘서울공화국’을 넘어, 광주광역시와 지방이 함께 숨 쉬는 대한민국으로 가자. 지방이 살면 나라가 산다. 이번 대선, 그 분수령을 넘어야 한다.

서석대



이제 호남에 희생 아닌 응답을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어김없이 호남을 찾는다. 국립5·18민주묘지를 마치 익숙한 통과의례처럼 방문하는 이들은 선거가 끝나면, 다시 수도권으로 향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부르짖는다.

이번 조기대선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후보는 전라남도 신안의 해상풍력단지를 찾았고, 김경수 후보는 광주광역시 양동시장을 찾아 광주·전남 발전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김동연 후보도 호남행을 준비 중이다. 각 캠프는 빠짐없이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이라 말하며 각종 지역 현안 해결과 함께 진정성 있는 공약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민주당의 약속은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군공항 이전을 비롯한 지역 현안을 약속하는 공약은 수 없이 반복됐으나, 현실은 그대로다. 오히려 이들 공약은 너무나 익숙해 공허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실제로 호남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희생했으며 이는 호남의 자부심이자, 오랜 긍지였다. 5·18이 그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이후 4월4일 탄핵심판이 선고되기 전까지 호남은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왔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수면 위로 올라온 ‘호남 홀대론’은 민주당을 향한 호남의 자부심을 서서히 허무로 바꾸고 있다.

일본 철학자인 다카하시 데쓰야는 사회 속에서 ‘희생의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통해 어떤 자들의 이익이 다른 것의 생활, 생명, 건강, 일상, 재산, 존엄, 희망 등을 희생시켜 산출되며 유지된다고 말한다.

다카하시에 따르면 희생시키는 자의 이익은 희생 당하는 것의 희생 없이는 산출되지 못하고 유지될 수도 없으며 이 희생은 통상 은폐되어 있거나 국가나 국민, 사회 기업 등의 공동체에 대한 ‘귀중한 희생’으로 미화되고 정당화된다. 그는 이익에는 언제나 향유자와 희생자가 분리되며, 이는 곧 희생의 시스템이자 일종의 식민지주의라고 비판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움직였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 희생했던 호남은 발전에서는 소외되며 존재감을 잃어갔으나 중요한 정치 상황에서는 희생을 강요당했다. 이에 전라남도는 의대 하나 없는 유일한 의료 공백지대로 남아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여전히 지역 혐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약속은 남았으나 변화는 없다.

민주당은 여전히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없다”고 말한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이제는 호남이 준 것에 응답해야 한다. 그 응답은 선거철 구호나 현장 방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 더 이상 ‘귀중한 희생’이라는 말로 호남의 헌신을 미화하고, 그 대가를 유예해서는 안 된다.

오지현 취재1부 기자

社說

밝혀진 국가 폭력, 이젠 국가가 책임져야

진화위 ‘목포 동명원’ 진실규명

지난 2014년까지 목포 ‘동명원’에서 자행됐던 인권유린 사건이 마침내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으로 이어졌다. 전남일보가 지난 2022년 연속 보도를 통해 실태를 고발한 지 3년여 만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피해사실을 공식 인정 받은 피해자에 위로를 보낸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추가 조사 등 정부 차원의 책임을 촉구한다.

2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지원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72년부터 목포 ‘동명원’에서 발생했다. 진화위 조사 결과 경찰과 공무원, 동명원 자체 단속반 등이 어린이들을 강제 수용해 강제노역과 강제 피임 시술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해왔고 2014년까지 유사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입증됐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간 수용됐고 퇴소도 불가능했다. ‘자활교육’을 명분으로 주·야간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조한 정황도 확인했다.

옛 동명원 인권침해 사건은 전남일보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전남일보는 지난 2022년 2월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실태를 추적 보도했고 ‘감금·성폭행…목포 옛 동명원 피해자들의 절규’ 등 총 9차례에 걸쳐 동명원의 어두웠던 과거사를 집중 조명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보도는 그 해 4월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회적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번 진화위 결정을 이끄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전남일보의 연속 보도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에 박수를 보낸다.

정부의 시책으로 운영된 시설에서 일상화됐던 폭력은 국가의 폭력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진화위가 권고한 공식 사과와 피해자 회복 지원에 즉시 나서야 한다. 추가 피해자 조사와 보상 제도화 등도 마련해야 한다. 강제 수용에 협조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태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그것이 통제와 억압 속에 오랜 세월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기재부, 시대 흐름 더 이상 거슬러선 안돼

달빛鐵 예타 면제 확정해야

지난 2024년 2월, 국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했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200㎞ 구간의 동서 횡단 철도, 이른바 ‘달빛철도’는 영·호남 시민이 1시간 생활권을 공유하는 역사적 대전환의 구상이다. 그 자체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오랜 지역 갈등의 틀을 문화와 교류, 경제의 선로로 전환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국가 재정당국의 책상 위에서 멈춰 서 있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미루고 있다.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게 이유다. 과연 이 판단은 타당한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철학과 지역민의 염원을 이렇게도 가볍게 저울질할 수 있는가. 기재부가 심각한 정책적 오판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23일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시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달빛철도의 신속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이 명시한 예타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 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수도권 중심 체제를 넘어 지역과 지역이 직접 연결되는 교통망은 그 출발점이다. 달빛철도는 그 상징이며 실현 가능한 대안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 사업을 부차적 과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기재부는 지금 당장 예타 면제를 결정하고, 멈춰선 시간을 다시 움직여야 한다.

1800만 영·호남 시민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오랜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역사에 남을 무책임이다. 기재부는 시대의 흐름을 더 이상 거슬러서는 안된다.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영·호남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해 국가 균형발전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